



서울시 7급 추가선발시험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추가채용 7급 행정학 시험은 예년 서울시 7급 시험과 같이 다소 난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방향성 분석〉

난도가 높은 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대비가 필요합니다.

1)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권과 로보그의 경쟁가치모형(1번), 정부조직개편(2번), 주민참여제도의 순서(3번), 롤즈의 정의론(6번), 정책네트워크모형(7번), 신공공서비스론(10번),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13번), 제도적 책임성(14번), 정책의 유형과 방안(20번) 등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2) 단순 두문자 중심의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류행정학 문제(5번)는 행정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행정의 활동(12번)은 최근 행정 경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성과평가방법과 모형 문제(11번)와 신성과주의 예산(18번) 등은 행정 성과와 관련된 종합적 이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3) **법령문제는 출제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강약을 조절하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투표 발의 권한(4번, 지방자치단체장 → 주민X), 부정청탁금지(8번, 초과 → 이하X), 직무이행명령(15일 이내 → 20일 이내X) 등 법령문제는 핵심 키워드를 바꾸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7급 추가채용 시험으로 올해 공무원 시험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득점을 위한 방향성’을 꼭 명심하시고, 향후 시험일정에 맞춰 더욱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 신용한 드림 -

2. 출제영역분석

총론	6	재무행정론	2
정책론	5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1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2	지방자치론	3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5	기출변형 문제	4	신유형 문제	1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7		2		1	6	4

01 조직효과성이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 ① 개방체제 관점
- ② 내부과정 관점
- ③ 인간관계 관점
- ④ 합리적 목표 관점

- 【해설】 ① [O] 개방체제모형의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을 강조한다.
 ② [X] 내부과정 관점에서는 안정성과 균형을 강조한다.
 ③ [X] 인간관계 관점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한다.
 ④ [X] 합리적 목표 관점에서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강조한다.

summary | 경합가치모형(경쟁가치 모형)

		구 조	
		내 부(인간)	외 부(조직)
초 점	유연성 (유통성)	- 인간관계모형 : 조직 그 자체보다 구성원을 중시하고, 유연한 구조를 중시 - 목표 : 인적자원 개발 - 수단 : 응집력, 사기 - 효과성 기준 : 조직 내 인적 자원의 가치의 개발	- 개방체제모형 : 조직 구성원보다 조직 자체를 중시하고, 구조의 유연성을 중시 - 목표 : <u>성장</u>, <u>자원확보</u> - 수단 : 유통성, 외적 평가 - 효과성 기준 :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통한 조직성장여부가 효과성 기준
	통 제	- 내부과정모형 : 조직 그 자체보다는 구성원을 중시하고, 조직의 안정을 강조 - 목표 : 안정성, 균형 - 수단 : 정보관리 - 효과성 기준 :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유지	- 합리적 목표모형 : 조직 구성원보다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안정을 강조 - 목표 : 생산성, 능률성 - 수단 : 기획, 목표 설정 - 효과성 기준 : 조직의 생산성, 이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05



02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 ㄹ. 일관성이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되었다.
-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해설】** ㄱ [O]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 ㄴ [X]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었다.
- ㄷ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본부장은 정무직).
- ㄹ [X] 수자원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직개편안에서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하려 하였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 ㅁ [O]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여 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였다.

□올바른 지문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었다.
- ㄹ. 수자원 관리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이다.

summary |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안 : ①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②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③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개편, ④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장관급으로 격상), ⑤ 대통령경호실 개편(대통령 경호처로 변경, 처장 직급을 장관급 □ 차관급으로 조정)

03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 ① 주민소환제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③ 주민투표제 ④ 주민소송제

【해설】 ①, ③, ④ [X] 1999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부터 2004년 주민투표제, 2005년 주민소송제,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② [O]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1999년에 도입된 조례제정개폐청구제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38

▶ ②

04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주민의 권리】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O]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④ [O]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올바른 지문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38~840

▶ ③

05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되었다.
-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 【해설】 ① [O] 미국 행정학은 1920~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관리과학 중심의 정통 행정학으로 모습을 갖췄다.
- ② [O] 태프트(Taft) 대통령의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1912년)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정통 행정학에서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 ③ [O]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일명 ‘브라운로 위원회’에서 굴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 ④ [X] 정통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정책 이전까지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의 원리를 유지했다. 즉, 정통행정학에 대한 반발적 기류는 1930년대 경제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행정국가가 등장하면서 형성됐다.

□올바른 지문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정책 이전까지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18~119

▶ ④

06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즈(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행정예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 【해설】 ① [X] 롤즈의 최소최대 (minimax)원칙이 아니라 최소극대화(최대최소, maximin)원칙이다. 최소극대화 원리란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지문

- ① 롤즈(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95~97

▶ ①

07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 【해설】 ① [O] 정책공동체는 제한된 참여와 안정적이며 지속적이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이다.
- ② [O]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며, 성격에 따라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③ [O]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참여자는 자원을 갖고 교환관계를 형성한다.
- ④ [X] 정책네트워크는 공적·사적 부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정책과정의 동태성이 증가하여 이를 분석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모형으로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다(단, 정책공동체의 경우 의도한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가능).

□올바른 지문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렵다.

summary |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비교

하위정부 모형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관료 + 의회 상임위 +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
안정적 · 폐쇄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안정적(지속적, 장기적)
이해관계 일치(동맹적)	경쟁적, 갈등적(Negative-sum game)	의존적, 협력적, 신뢰(Positive-sum game)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의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분배정책분야에서 주로 형성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 큼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정책내용 합리성 제고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03~207

▶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을 8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설】 ① [O]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X]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O] 동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O]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올바른 지문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70, 571

▶ ②

| 개념 |

09 라스웰(La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해설】 ① [O] ‘정책지향’에서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② [X]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③ [O] 라스웰은 ‘의사결정’이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④ [O] 정책학은 법학문적 성격과 방법론상의 다양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올바른 지문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85~187



| 개념 + 말바꾸기 |

10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의의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③ [X] 정부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하며, 시민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조력하는 역할이 요구됨.

□올바른 지문

-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summary |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원칙

- ① 시민에 대한 봉사 :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라”
- ② 공익의 중시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③ 시민의식의 중시 :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 ④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 ⑤ 책임의 다원성 :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 ⑥ 조종이 아닌 봉사 : “조종하기보다 봉사하기를 하라”
- ⑦ 인간존중 :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77



11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ㄴ. 성과표준방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X] 논리모형(Logic Model)은 프로그램의 산출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 변화인 결과와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하는 것은 목표모형이다.
 ㄷ [X]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 조직의 내부요소와 외부요소(고객),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올바른 지문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근본적이고 장기적 변화인 결과와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ㄴ.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과 고객 관점 등을 모두 고려하는 평가방법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42, 509



12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해설】 ④ [X] 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행정을 수행하되,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준정부기관 또는 민간부분과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분배한다.

□올바른 지문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준정부기관 또는 민간부분과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분배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



13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용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ㅁ. 계속비제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ㄹ, ㅁ, ㅂ
- ④ ㄴ, ㄹ, ㅁ

【해설】 ㄱ [X] 총액계상예산은 세부 사업별 예산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ㄴ, ㄷ [X] 이용과 전용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상호용통하는 것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58 ~ 662

▶ ③

14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해설】 ④ [X] 제도적 책임성은 법률,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에 의한 통제, 관료의 대중이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책임이다.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자율적 책임이다.

□올바른 지문

- ④ 자율적 책임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46

▶ ④

15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시장의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서울시장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③ [X]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바른 지문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88~889

▶ ③

16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해설】 ① [X] 포자모형은 포자가 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게 되면 군사로 변화하듯이 적절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될 때 즉, 일반국민들이 해당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하여 강한 관심을 보일 때 이슈가 정책의제로 발전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② [X] Downs는 공공의 관심을 끌기 국민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슈관심주기를 개발하였다. 어떤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공공의 장에서 다른 공공이슈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X] 정책흐름 모형은 무정부적 상태에서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것이다.

□올바른 지문

- ① 포자모형은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 보다는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슈자체가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무정부적 상태에서의 합리성과 유사한 합리성 가정을 정책의제설정과정 설명에 적용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46, 213, 260

▶ ④

17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해설】 ② [×] 크랜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은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공장공해는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전체적 문제이며, 전체적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혜택을 보는 전체국민은 이를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이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부시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고 본다. 그러므로 선거에 임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정책문제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전체적 문제는 정책문제화하기 어렵게 된다.

□올바른 지문

- ② 크랜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정책의제화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14, 215

▶ ②

18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설】 ② [×] 예산개혁의 접근면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비해, 새로운 신성과주의 예산은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예산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을 예산개혁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지문

- ② 과거의 성과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summary | 과거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비교

구 분	과거 성과주의(PBS)	신성과주의(NPBS)
시 대	1950년대 행정국가를 배경	1980년대 신행정국가를 배경
초 점	업무, 활동, 직접적 산출에 관심	결과에 관심, 즉 효과성 강조
가 정	투입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가정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주요 내용	업무, 활동과 비용정보를 연결	사업을 성과와 연결
범 위	예산편성과정에 국한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와 연계 (인사, 조직, 예산, 평가, 감사)
결정흐름	상향식(분권)	집권과 분권의 조화
성과책임	정치적□도덕적 책임	구체적□보상적 책임(유인과 처벌)
성과의 관점	정부(공무원) 관점	고객 관점
원가 중심점	단위사업	프로그램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94~696

▶ ③

19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자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해설】 ① [×]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 정치적 능력의 세 가지가 있다.

행정능력	내 용
지적 능력	전문지식, 정보, 창의성
실행적 능력	리더십과 동기부여, 자원확보능력, 외부(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
정치적 능력	간접 민주주의적 책임확보, 직접 민주주의적 책임확보, 고객주의적 대응성 확보

□올바른 지문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 정치적 능력의 세 가지가 있다.

【참고】



20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로위(Lowi)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③ 로위(Lowi)는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은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해설】 ② [×]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은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추출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 로위(Lowi)는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을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④ [×] 로위(Lowi)의 정책 분류의 기본개념들의 모호함은 조작화를 어렵게 한다.

□올바른 지문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추출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로위(Lowi)는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을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④ 로위(Lowi)의 정책 분류는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어렵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88~191

